

◆ [Focus] EU, 그린딜 산업 계획 추진 공식화(EU형 IRA)

◆ [What's News]

- (마중관계) 블링컨, 중국 공식 방문 무기한 연기
- (301조) USTR, 대중 301조 관세 면제 잠정 연장
- (의회동향) 하원 세입위, 불공정 무역 근절과 新수출시장 개척에 집중
- (iCET) 미국-인도, 핵심·신흥 기술 협의체 발족
- (입법동향) 미 상원, 농업 보호 및 보안 촉진법 발의
- (IRA) 미 하원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폐기법안 발의
- (IRA) 미 재무부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위한 차량 분류기준 변경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(IRA) EU, 그린딜 산업 계획 추진 공식화(EU형 IRA)

#### □ 유럽연합(EU) 그린딜 산업 계획 발표(2.1)

- 미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(EU)의 '그린딜 산업 계획'(Green Deal Industrial Plan) 추진 공식화
  - \* 유럽연합(EU) 정상회의(2.9~10일, 벨기에 브뤼셀)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
-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.1일 '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'을 담은 통신문(Communication)을 발표
- 크게 네 개의 중점 분야로 구성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맞서 유럽 연합의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을 목표로 함.
- CNN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해 이번 그린딜 계획에 약 2,500억 유로의 EU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도
  - \*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 신설도 추진 계획

**【Pillar1】 규제 환경 개선**

- 탄소 중립 위한 핵심 산업 확대를 위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, '30년까지 EU 청정기술 목표식별 및 전략 프로젝트 중점 투자하는 탄소중립 산업법 추진
- 관련 산업의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핵심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 연계 추진

**【Pillar2】 투자 · 자금지원**

- 역내 청정기술 생산시설 역외 이전 방지 위해 인센티브, 국가보조금 확대 한편 유럽주권기금 등 EU 기금 확대 통해 단일 시장 보호

**【Pillar3】 기술 개발**

- 청정기술 확대 위해 개발 인력 및 숙련된 설치·운영 기술자 양성

**【Pillar4】 무역**

- 역내·외 공정한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야심찬 무역의제 설정 한편 역외보조금 등 시장왜곡 일으키는 관행에 EU 규정 통해 단호히 대응

[자료] KOTRA 브뤼셀무역관

□ 회원국 간 보조금 편중, 자원 조달 관련 입장 차 등 현안 산적

- (보조금 편중) 과거 보조금이 경제력이 큰 소수 국가에 편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점을 근거로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 불평등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되풀이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덴마크, 핀란드, 아일랜드, 네덜란드, 폴란드, 스웨덴 정부는 “대량 생산과 산업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역내 시장의 분열, 해로운 보조금 경쟁, 지역 개발 약화 등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”라고 언급
- 실제로 EU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보조금 총 6,720억 유로 중 53%에 달하는 3,560억 달러는 독일이, 24.1%는 프랑스가 수혜를 본 것으로 조사

- (재원 조달) EU의 재정 악화와 높은 물가상승률, 계속되는 금리 인상 등 미국의 공격적인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 제기
  - 유로존(유로화 사용 19개국)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현재 평균 93%로 이탈리아(147.3%), 프랑스(113.4%), 스페인(115.6%) 등은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
  - 이 같은 상황에서 '녹색보조금'에 쓸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경우 EU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
  -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“독일과 네덜란드 등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회원국들은 부채 발행 등 추가 차입에 매우 부정적”이라고 발표
  - 유럽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9%를 넘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(ECB)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차입 확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- (차별성 논란) EU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'핏포55' 등 기존 정책으로 이미 친환경 보조금이 시장에 풍족한 상황에 이번 그린딜 산업 계획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
  - \* 보조금은 2020년 이미 810억 유로에 이른 것으로 파악
  - 유럽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EU 내에서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6,500달러로 미국이 IRA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7,500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

#### 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- 현지 언론 폴리티코는 유럽이 이길 수 없는 보조금 전쟁(subsidy war it can't win)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  - EU 정상회의(2.9~10)가 예정된 가운데 역내 회원국의 견해 차이로 세부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과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미국도 알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-EU 간 향후 협상 향방에 주목
  - 익명의 미국 한 관리는 “EU가 녹색 전환을 위해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”고 평가하면서도 “기업들은 가장 매력적인 녹색 비즈니스 환경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”고 인터뷰

\* 자료 : 폴리티코(1.30, 21), 블룸버그(21) 보도자료 및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

□ **(미·중관계) 블링컨, 중국 공식 방문 무기한 연기**

- (개요) 2.5~2.6로 예정됐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계획이 미국 영공에서 발생한 중국 '스파이 벌룬'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 (2.3 발표)
  - 이에 앞서 1.31에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은 블링컨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이 중국 내부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 발송
- (상세) 동 서한은 두 장관에게 중국의 인권 문제, 불공정 무역 관행, 아태지역 내 강압적인 외교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를 주문
  - (1) 인권 문제 : 신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과 미국인 불법 구금을 근거로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
  - (2) 무역 관행 : 중국의 지식 재산권 및 기술 절취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 비판을 주문
  - (3) 아태지역 외교 :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하고, 이를 “용납할 수 없고 도발적인 행동”으로 규정
- (반응) 국무부는 이번 '스파이 벌룬' 사건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면서도, 추후 장관의 방중 재추진 가능성을 언급
  - 또한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타계하기 위해 외교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과 개방적인 대화 채널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

\* 자료 : 상원 서한([1.31](#)), 인사이드트레이드([2.1](#)), WSJ([2.3](#))

□ **(301조) USTR, 대중 301조 관세 면제 잠정 연장**

- (내용) USTR은 81개 코로나 관련 제품의 대중 301조 관세 면제 연장 (2.2)
  - 2.28 만료 예정인 면제 조치를 75일 후인 5.15까지 잠정 연장
    - \* 해당 면제 조치는 '20.12월에 최초 시작, '22.11월까지 정기적으로 연장되어왔음
  - USTR은 해당 조치에 대한 공개의견 청취(2.6~3.7) 후 최종 결정 예정
  - 그 외 352개 품목(각종 산업재)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는 9.30에 만료 예정이며, 현재 USTR은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 중

- (수입 동향) 마스크, MRI, 엑스레이 기기 등 포함 상기 81개 방역·의료 품목 관련 미국의 전체 수입은 '22.11월 기준 465억 달러 기록
  -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25.1%인 약 117억 달러이며,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은 3.5%(16억 달러)로 전체 국가 중 6위 차지

< 미국의 코로나 관련 품목 수입 동향 (단위 : 백만 달러) >

국가	'19년	'20년	'21년	'22년 (11월까지)	비중('22년)
중국	10,601	20,525	13,513	11,681	25.1%
멕시코	7,909	7,859	9,360	9,521	20.5%
캐나다	3,947	4,388	5,216	5,109	11.0%
독일	3,205	3,045	3,527	3,143	6.8%
일본	1,816	1,591	1,953	1,627	3.5%
한국	1,300	1,494	1,802	1,605	3.5%
전 세계	39,976	51,441	49,827	46,480	100%

[자료] USITC Dataweb

\* 자료 : USTR(2.2), 미국 관보(2.2), 인사이드트레이드(2.2)

## □ (의회동향) 하원 세입위, 불공정 무역 근절과 新수출시장 개척에 집중

- (개요) 신임 제이스 스미스 위원장은 하원 세입 위원회 중대 의제 발표(1.31)
  - △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정책 추구 △중산층 감세, △인플레이션 대응, △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결, △국세청 감시 감독 강화 등 강조
- (내용) 118대 세입위 첫 모임에서 현 정부 무역 정책에 강력한 견제 예고
  -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과 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의지 표출
  - 바이든 정부 무역정책 실패로 (1) 식량·에너지 안보 실패, (2) 주요 교역 파트너에 대한 홀대, (3) 중국의 해외 영향력 확대 견제 실패, (4) 미국 기업의 新 수출시장 기회 축소 등 지적
  - 미국 기업이 특혜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이 전 세계 인구의 10%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,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 시사
- (위원회 구성) 하원 세입 위원회 소속 의원 구성 공식 확정 (1.31)
  - 공화당 소속 25명, 민주당 소속 18명 의원 배정. 소수당 간사(Ranking Member)에 리처드 닐, 부위원장(Vice Chair)에 번 뷰캐넌 의원 결정

\* 자료 : 하원 세입위 홈페이지(1.31)

## □ (iCET) 미국-인도, 핵심·신흥 기술 협의체 발족

- (개요) 양국 국가안보보좌관은 iCET(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) 구상으로 안보, 기술협력, 규제 장벽 관련 협력을 강화
  -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창립한 이번 iCET 구상에 많은 방산·기술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, iCET의 실효성에 현지 관심 집중
- (안건) 신흥 기술로 인공지능·양자 기술·우주 기술 등을, 핵심 기술로 국방·반도체·보안정보 등을 논의
  - ① 혁신 생태계 강화(Strengthening our Innovation Ecosystem)
    - 인공지능, 양자 기술, HPC 기술 및 소스 코드 관련 기술 개발 협력 강화, 표준 설정 및 규제 완화
  - ② 국방혁신과 기술협력(Defense Innov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on)
    - (1) 군수 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개발·생산 로드맵 개발, (2) GE 사의 인도 내 제트 엔진 생산 공정 검토, (3) 해양 보안 및 정보 감시 정찰(ISR) 연구 개발 협력 강화
  - ③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(Resilient Semiconductor Supply Chain)
    - 미국 반도체 인력 수급 및 인도 반도체 기업 기술 개발 논의를 통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
  - ④ 기타 안건
    - NASA와 인도 우주 연구 기구(ISRO) 교류 강화, STEM 연구 및 대학 교류 강화, 차세대 통신(5·6G) 연구 협력 등
    - 차회 iCET 회의는 '23년 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
- (반응) 미국·인도, 대중경쟁 필요성 공유로 협력 강화 전망
  - 다수 언론은 △ 대중 의존도 완화로 신규 공급망을 모색하는 미국과 △ 대중 안보 강화 및 자국 기술 기업 투자 증대를 희망하는 인도의 관심사가 회담에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

\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([1.31](#)), 월스트리트저널([1.31](#))

## □ (입법동향) 미 상원, 농업 보호 및 보안 촉진법 발의

- (개요) 양당 상원의원\*들은 농업 보호 및 보안 촉진법(PASS; Promoting Agriculture Safeguards and Security) 발의 (1.31)
  - \* 주요 발의자: 존 테스터(민주 존 튜(공화), 케빈 글레머(공화), 신시아 루민스(공화), 존 호에벤(공화) 등
  - 주요 내용은 (1) 우려국(러시아, 중국 등)의 미국 농지 및 농업 회사 인수 금지, (2) 외국인투자위원회(CFIUS) 내 농무부 참여 등 추진
- (동향) 미국 식품 공급망 내 중국 비중 축소에 초당적 합의 기류
  - (의회) 오스틴 스콧(Austin Scott)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 종자·비료 공급에 대한 미국 농산업의 의존도가 커지는 점을 우려
  -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일부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중경쟁 정책에 식량안보 관련 주제도 포함할 필요성을 언급
  - (업계) 한편, 미국 내 농업 그룹\* 대표들은 의회와 주요 정부 부처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 확대 의견을 전달(2.2~3일)
    - \* 전국우유생산자연맹(NMPF), 전국옥수수재배자협회(NCGA), 전미밀재배자협회(NAWG) 등
  - 최근 미·중 경쟁 심화로 농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 확대
    - \* USDA: '23년 미국 농산물 예상 수출액 1,900억 달러 중 대중 수출액을 340억 달러로 전망

\* 자료 : 폴리τικο([2.2](#), [2.3](#))

## □ (IRA) 미 하원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폐기법안 발의

- (개요)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법안(2023 Inflation Reduction Act) 발의(2.2)
  - 앤디 오글레스(Andy Ogles) 의원 외 공화당 소속 의원 20명 공동 제출
  - 민주당 정부가 '22년 IRA 법을 통해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, 해당 법의 무효화(repeal) 추진을 목적으로 함.
- (전망) 최종 입법 가능성 희박 전망 지배적
  - 동 법안은 하원 세입위, 에너지·상무위 등 총 8개 상임위에 전달 (2.2)되어 향후 소관 위원회별 법안 심사 예정

\* 자료 : 미국 의회 홈페이지([2.2](#))

## □ (IRA) 미 재무부, 전기차 보조금 지급 위한 차량 분류기준 변경

- (개요) 미 재무부,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분류기준을 기업평균연비제(CAFE)에서 EPA 연비표시 기준으로 변경
  -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소매가격은 세단(\$55,000)과 SUV·픽업트럭(\$80,000) 등 차종별로 다르게 운영
  - 재무부는 이번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밝혀
  - 기존 분류기준으로는 유사한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도 일부는 세단, 일부는 SUV로 분류되어 소비자에게 혼선 야기
- (영향) 이번 조치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 확대
  -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기존에는 7인승 버전과 달리 5인승 버전은 세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SUV로 분류되어 보조금 수혜 가능
    - \* 단, 모델Y의 경우 최근 \$55,000 이하로 가격인하, 보조금 지급대상이었음
  - 캐딜락 리릭, 포드 머스탱 마하-E 등도 보조금 신규 수혜 대상
  - 현대차의 eGV70도 이번 조치로 SUV로 분류, 보조금 수혜 전망
    - \* 현대차는 알라배마주 공장에서 eGV70을 생산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음

\* 자료 : 재무부 보도자료(2.3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U.S. Added 517,000 Jobs as Hiring Accelerated in January</a> (미국, 517천개의 신규 고용... 1월 고용시장 활성화)</p> <p>올 1월 급여소득은 2022년 7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고용 둔화 추세를 반전. 3.4%의 실업률은 근 50년 중 최저. 연봉인상율은 둔화 중.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Blinken postpones Beijing trip as U.S. probes suspected spy balloon</a> (정찰풍선 문제로 블링컨, 베이징 방문 연기)</p> <p>바이든 대통령, 중국의 정찰풍선 활용 혐의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출발 직전 전격 연기... 블링컨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방문하겠다고 통보</p>
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E.U. Leaders Offer Encouragement, but Membership for Ukraine Is Still Distant</a> (장려는 받고있으나... 아직은 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)</p> <p>젤렌스키,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셸 EU 상임의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. 우크라이나의 연내 EU 가입 협상 시작을 요청했으나 확답을 피해</p>
CNN	<p><a href="#">Suspected Chinese spy balloon triggers diplomatic crisis</a> (중국 정찰풍선으로 촉발된 외교 위기)</p> <p>바이든, 블링컨의 방중 직전 전격 연기. 미 국방부의 권고로 풍선을 격추하는 대신 방중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. 미중 관계 개선, 암초를 맞닥뜨려</p>
USA Today	<p><a href="#">Blinken cancels China trip as Chinese deny they're operating a spy balloon</a> (중국, 풍선을 활용한 엠탐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블링컨, 방중 취소)</p> <p>블링컨, 방중 취소. 중국 정부는 몬타나 상공을 부유하고 있던 풍선이 엠탐용이 아님을 주장. 미군은 풍선 처리 방안을 논의 중.</p>

\* 미국 동부시간 2월 3일 12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게재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03	<a href="#">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 판결 결과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US23-02	<a href="#">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</a>	2023.01월
US23-01	<a href="#">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증대 정책의제</a>	2023.01월
US22-45	<a href="#">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44	<a href="#">제3차 미-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43	<a href="#">미·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42	<a href="#">美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1주년 실적 평가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41	<a href="#">G20 美·中 정상회담 이후 아·태 이슈에 대한 반응 및 전망</a>	2022.12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7 (2022.12.26.)		
코인시-6 (2022.12.26.)		